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3면
"김민석, 신천지 개입 의혹 근거 즉시 공개해야"

5면
전주시, 지역 밀착형 정원 문화복지 안착

전주매일

2026년 7월 23일 목요일 (음 6월 10일) 제401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새만금 MP 재수립 대응 총력

〈기본계획〉

도 "기존 2050년에서 2035년까지 사업기간 15년 단축"
공공주도로 개발, 산업단지 · 핵심 기반시설 반영 추진
현대차 투자 본격화 대비 지역성장 기반 확보 나서기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하반기 확정을 앞둔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에 대응해 공공주도 개발과 첨단 미래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 2050년까지 추진하던 새만금 개발계획을 2035년으로 15년 앞당기고, 민간 중심 개발에서 공공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재수립 중이다.

매립 면적도 기존 240.5㎢에서 169.6㎢로 약 30% 축소하는 대신 공공이 신속하게 용지를 조성하고 핵심 인프라를 구축해 사업 실행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앞서 지난 2월 전북도 타운홀미팅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산업·도시용지 확대와 공공주도 개발 방향을 제시했으며, 6월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매립을 최소화하고 절감된 예산을 지역 개발에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7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노출지 에너지용지 활용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10GW 공급 확대 △RE100 산업단지 지정 추진 △현대차그룹 투자사업의 2027년 초 착공을 위한 산업용지 적기 공급 △메가특구 지정 △교통·주거여건 개선 등이 새만금 개발의 핵심 추진 방향으로 발표됐다.

새만금은 1991년 방조제 착공 이후 국가 주도의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추진돼 왔으나, 장기간 사업으로 인해 변화하는 산업환경과 기업 투자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은 장기 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고 2035년까지의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전환해 공공주도의 신속한 용지 조성과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의 적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국가산업단지 3·7·8공구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으며, 4·9공구도 2030년까지 조성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제2산업단지 개발과 AI 기반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재생에너지 확충 등 미래 성장거점 조성도 병행되고 있어 산업용지와 전력·용수 확보가 새만금 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정부의 공공주도 개발 기조에 맞춰 △군산·김제·부안시·군별 산업용지 균형 확대 △반도체·AI 투자에 대비한 전력·용수 및 재생에너지 10GW 기반시설 적기 확충 △과학기술 분야와 농생명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식품산업단지 100만평 확대 등을 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중점 건의하고 있다.

도는 새만금개발청과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과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을 대상으로 주요 건의사항을 설명하며 공감대 형성과 협력체계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전북도는 오는 8월 말 예정된 새만금위원회 심의와 기본계획 확정에 적극 대응해 지역 핵심 현안이 계획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특히 현대차 투자 본격화에 대비해 산업용지와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고, 공공주도 개발 방향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철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은 새만금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산업용지와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미래 성장거점 조성계획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과 관계부처, 지역 국회의원,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김윤덕(앞줄 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2일 전주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새만금·전북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새만금 대기업 투자 성과, 지역 성장으로'

새만금청-전북상협, '새만금 · 전북 기업간담회' 개최
첨단산업 투자계획 · 지역인재 양성 · 상생협력 등 제시

새만금개발청과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가 새만금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 투자 성과를 지역 기업 성장과 청년 고용으로 연결하기 위한 상생 협력 논의에 본격 나섰다.

새만금개발청(청장 문성요)과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정태)는 22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새만금·전북 기업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기업의 대규모 지방 투자 대표 사례로 꼽히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선도 기업과 지역 중소·중견기업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 김정태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 현대자동차그룹, LS엘앤에프배터리솔루션, 퓨처그라프 등 새만금 핵심 선도 기업 대표와 임원진이 참석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로봇·인공지능(AI)·수소·이차전지·건설 분야 주요 지역기업 대표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등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함께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윤덕 장관은 "현대차에서 투자를 발표한 뒤 현대차와 회의도 진행하고 필요한 타부처하고도 협의를 진행하는데 속도감을 가지려고 하는데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과 협력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거에 대해 제때 도와주고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기업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이 많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도 현대차와 밀접하게 일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국토부에서 할 것이 있다면 빠르게 진행해서 현대차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만금 투자가 성공하려면 현대차 그룹이 명확히 해서 투자가 중요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이 정주여건이다. 도시를 만들어서 연계해서 도시가 활성화 해야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도시를 만드려면 의료와 교육, 젊은 층은 문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도시를 만들어본 경험있는 사람이 진두지휘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이후 산업단지를 만들어야하고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국토부에서 청장, 차장,국장까지 모두 국토부에서 새만금개발청으로 내려와있다.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이 한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새만금 미래 첨단산업 투자계획을 발표했으며, 전북대학교는 지역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확대 방안을 소개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투자 현황과 향후 상생협력 추진 방향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협력 청사진을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로봇·AI·수소·이차전지·건설 분야 지역기업 대표들이 기술협력, 공급망 참여, 인력 양성, 투자 연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선도 기업들은 지역기업의 공급망 진입 확대와 공동 연구개발, 인재 양성 프로그램 등 지원 방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기업 간 협의체 운영을 통해 대기업 투자 효과가 지역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도, '2026 전북형 C형간염 퇴치사업' 선제 추진

50대 이상 고위험군 등 도민 6000명 대상 항체검사 추진
조기검진부터 확진 · 치료 연계까지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

전북특별자치도는 C형간염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로 연계하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026년 전북형 C형간염 퇴치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C형간염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 감염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지만, 방치하면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

반면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95% 이상 완치가 가능한 만큼 조기검진과 치료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는 세계보건기구(WHO)의 2030년 바이러스 간염 퇴치 목표에 맞춰 지난 2024년부터 14개 시군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협력해 고위험군 선별검사, 확진검사 지원, 미치료자 추적관리와 치료 연계 등 전북형 통합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도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50대 이상과 침습적 시술 경험자, C형간염 밀접 접촉자 등 고위험군이며, 문신·피어싱 업소와 의료기관 종사자 등 감염취약 대상까지 검사를 확대한다. 항체 양성자는 확진검사와 치료로 연계하고 문자·전화 상담 등을 통한 추적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항체검사 1만 건을 실시해 양성자 84명을 조기에 발견하고 확진검사비 지원과 치료 연계체계를 구축했다.

올해는 지난해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고위험군 중심의 선별검사와 사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조기 발견과 치료율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